법적분쟁 지속…대사회 기조 유지 · 확대

불교계, 해 넘는 논란 · 과제

선암사 소송, 올해 판가름
나눔의집 '해임무효소송'이
정상화의 향방 가를 전환점
기후대응 · 차별금지법 촉구
보다 실천적 동력으로 확대


순천 선암사를 두고 이어진 조계종 · 태고종간 분쟁은 해를 넘어 올해까지 지속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 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선암사 순천시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하면서 선암사를 사이에 둔 조계종 · 태고종간의 소유권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조계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선암사의 조계종 교구본사로서의 지위 회복에 나섰다. 태고종의 경우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가운데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법정 소송은 지난해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조정기일이 연기 · 변경되면서 조계종 · 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해 넘는 법정소송으로 올해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정상화 과제

지난해 불교계는 나눔의집 사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사진들에게 제기됐던 횡령 · 배임의혹 등은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 기로에 서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대표이사 태공 월주 대종사가 입적하면서 불교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눔의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일부 내부직원들은 이사진이 혐의를 벗은 후에도, 운영진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사스님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 의 결과가 향방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인권과 거주안정을 위해 불교계 원력이 결집된 나눔의집이 올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되길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높다.

도넘는 가톨릭 성지화 논란

수년째 반복돼 온 가톨릭 성지화 및 성지순례길 논란이 지난해 또다시 불거지면서 불교계 이목을 끌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추진돼 온 성지화 사업들이, 지역불교계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흔들림없이 성사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교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어사와 천진암 등 과거 사찰이 존재했던 불교유적지에 가톨릭성지화가 진행되면서 역사 덮어씌우기 논란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안에 해미국제성지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예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산시 전역에 분포된 불교유적지와 해미읍성 등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이 '가톨릭 성지화' 에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주어사, 천진암, 해미읍성 등을 중심으로 가톨릭성지화의 종교편향 혹은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가 불교계 화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화종 정상화 과제

오랜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법화종이 서서히 정상화 반열에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새롭게 추대된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자격문제와 관련한 각종 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적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보된 만큼, 올해부터는 종무행정 정상화와 종단 체계 회복과 대외 활동 재개 등에 따른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 대표종찰인 안정사의 탈종공고가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해당 공고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전통사찰 관련법에 명시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단차원에서 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법화종은 올 3월께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서리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기후위기 대응 구체화

기후위기의 대안이 불교적 가치에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불교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 차원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의 탄소중립 강화기조에 발맞춘, 보다 불교적이고 실천적인 의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촉구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불교계의 입법촉구 활동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는 가운데,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 불교계 대결집

임인년, 종교편향 근절되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승려대회 1월21일 개최키로



오랜세월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 행위를 규탄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올 1월 21일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불자들이 가세한 범불교도대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결집을 예고함에 따라, 올한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불교계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구랍 23일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 및 범불교도대회 추진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스님들은 전국승려대회 및 범불교도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행 계획을 논의한 결과,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본말사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수좌 스님과 각급 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개최키로 했다.

장소는 서울 조계사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가운데 한 곳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범불교 차원의 현안인 만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과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랍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종교편향불교왜곡범종단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승려대회 참석의 건을 상정해 통과했다. 따라서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 소속 종단과 연대한 범종단차원의 결집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승려대회 이후에도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가불자들이 결합한 가운데 대규모 범불교도대회가 봉행된다. 범불교도대회는 2월 26일 혹은 2월 27일, 서울시청 광장 및 광화문 광장을 후보군으로 논의키로 했다.

승려대회까지 각 교구본사 차원의 실천행동 계획도 확정됐다. 이를 통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태에 대한 불자들의 공의를 모으고 실천적 행보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각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더불어민주당사 및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백안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불교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당 이름처럼 정의롭게" 당부

구랍 21일 심상정 후보 예방서 심후보, "차별금지법 제정관련 적극 나선 스님들께 감사"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정의당이라는 당명처럼 정의롭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구랍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심상정 후보에게 "정의당이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상정 대선후보의 예방에는 이은주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 인도 사성계급이 모두 평등하다고 설하셨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의당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스님들이 오체투지 등 헌신적으로 앞장서줘 큰 힘이 됐다"며 "원장스님께서 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찰기채 금리인상 불가피…재정부담 우려

조계종 재무부, 지난해 말 안내 원금 조기상환 · 기채유예 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찰 기채(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채 보유 사찰 가운데 원금 상환율이 낮거나 신규기채가 예상되는 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계종 재무부가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원금 조기상환 및 기채 유예 등을 권고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재무부장 탄하)는 구랍 2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찰 기채(대출) 금리인상 가능성' 제하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찰 재정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 인상폭을 감안할 경우 2022년 사찰 기채에 대한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사찰의 기채 금리 인상폭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는 "종단 소속 사찰의 기채(대출) 금리도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종단과 농협(종로금융센터)이 상호 협의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인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해 2021년 11월 1일 기존 2.90%에서 0.40% 인상돼 신규 기채는 대출금리 3.30%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현재 은행측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사찰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무부는 "신규 기채 발생 사찰이나 원금상환이 미비한 사찰의 경우 추가 금리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기채의 원금상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불사 등으로 사찰의 재정운용 상 기채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채 발생을 최대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규기채 발생 시 은행 대출은 기채 원인 금액(예: 불사비 또는 부동산 매입비)의 80%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자 연체 시 종단과 약정된 이율과 관계없이 고율의 가산금리가 원금상환 시까지 적용되어 사찰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임인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